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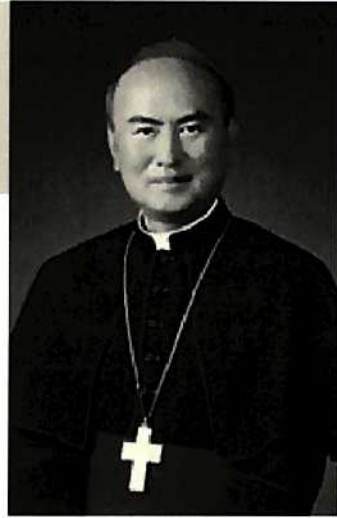
## 차 례

1. 인사말 / 최기산 주교	4
2. 사형제도 폐지 / 종신형제도 입법화를 위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서명	6
3. 기사 스크랩	8
4. 유영철 피해자, 고정원 선생 인터뷰	10
5. 유영철 피해자, 고정원 선생 탄원서	12
6. 사형수 유영철 편지	14
7. 사형폐지의 근거와 대안 / 김형태 변호사	16
8. 나는 오늘 모든 사형수를 감형한다 / 조지 라이언	24
9. 사형제도와 인권 침해 / 이영우 신부	26
10. 살인 피해자 유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38
11. 희망여행	39
12. 처형보다 위로를 원합니다.	40
13.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방법	41
14.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42

[인사말]

##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기산 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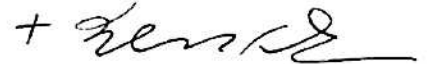
2007년 12월 30일은 참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할 뜻 깊은 날입니다. 그 날까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만 10년 동안 사형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통과되어야 사형제도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게 되면, 사형집행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설립하여 타 종교 및 인권·시민운동과 함께 연대해왔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교도소에서 '최고수'라 불리는 사형수들과 주기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며, 그들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주교님들을 비롯하여, 11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국회에 청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에는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열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음을 미리 만천하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이번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미 출판했던 '관사님 질대로 죽여서는 안됩니다'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책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함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생명은 누구의 것이나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에 공감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10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

## 사형제도 폐지/종신형제도 입법화를 위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서명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4일부터 사형제도 폐지 서명운동을 전국교구 본당, 수도회에서 전개하였다. 이미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5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같이 하였고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한 현직 주교들(2005년 12월 주교단)이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전국의 가톨릭 신자 11만5천861명이 동참하였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이 서명을 첨부한 사형제도 폐지 청원서를 3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진석 추기경	이문의 대주교	최창무 대주교	최영수 대주교
강우일 주교	정병조 주교	이병호 주교	김지석 주교
장익주교	최덕기 주교	장봉훈 주교	이기현 주교
최기산 주교	안병욱 주교	권혁주 주교	이한택 주교
유홍식 주교	염수정 주교	김운희 주교	이용훈 주교
김희중 주교	이동호 아사스		

## 사형제도 폐지/종신형제도 입법화를 위한 7대 종단 원로 서명

사형제도 폐지를 의제로 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등 사형제를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7대 종단 원로들을 비롯한 종교계가 다시 한번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지관 스님 등 종단 원로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이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4월 4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성명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우리는 법과 제도의 미명하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폐도적 살인'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장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의 입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1.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사형제가 국제법상 위배된다는 사실을 모든 국가가 선언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사형제폐지조약'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2.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과 관련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고집하는 것은 교정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살인을 통해 사회공통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아가 진정한 속죄와 양심의 재생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국회에 권유한다. 지난 15대, 16대에 이어 이번 제 17대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법안은 발의한 한 제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번 4월에 시작되는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입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6. 4. 4.

[기사 스크랩]

## “유영철 용서…양자 삼고 싶다” 가족 셋 잃은 고정원씨, “두 자녀도 돌볼 것”



사형수 유영철씨의 연쇄 살인 행각에 가족 셋을 한꺼번에 잃고도 유씨를 용서한 고정원 (64)씨. 그의 용서의 끝은 어디인가.

유씨의 사형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 편지를 내기도 했던 고씨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유씨를 양자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가 자신을 교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조성에 수녀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니 나름대로 인간성이나 문학적 소질, 재능도 있더라”며 “이런 것을 봤을 때, 내 아들을 죽였어도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양자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고씨는 또 “사형제가 유지되든 폐지되든 유영철은 그 제한된 장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텐데, 동정이 가는 것은 그가 남겼다는 자녀 둘”이라며 “유영철이 허락하고 상황이 된다면 내 친손자, 손녀처럼 돌봐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애들이 평생 아빠를 그리워할 테니 내가 사는 동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아들과 딸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런 뜻을 조 수녀한테 전했고, 조 수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씨에게 이런 사실을 곧 전달할 계획이다. 조 수녀는 “외국은 피해자 가족을 정서적으로 돕는 기반이 잘 돼 있지만 우리는 피해자 가족과 접촉하기도 어렵다”며 “고씨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10월 노모와 부인, 아들을 유씨의 손에 잃은 고씨는 사건을 당한 뒤 괴로워하다 유씨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유씨의 재판 과정에 탄원 편지를 낸 바 있다. 고씨는 지난 설날 유씨에게 영치금을 넣어달라며 조 수녀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씨의 마음을 전해들은 유씨는 2월 조 수녀에게 보낸 참회 편지에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고정원님처럼 사랑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기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분과 인연을 맺고 계시다니 나중이라도 이 못난 사람의 글 좀 전해 주십시오.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놀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감동이 앞섭니다.”

박용현 이순혁 기자 piao@hani.co.kr

[피해자 인터뷰]

## 사형폐지운동 나선 고정원씨

유영철 살인 피해자 가족  
어머니, 아내, 4대 독자 아들 희생됨



사형수를 죽인다고 해서 맺힌 한이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범 죄율이 줄어드는 것 또한 아니고요. 따라서 사형제는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제가 유영철을 용서하고 양아들 삼기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범죄자는 사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주로 나옵니다. 이들을 범 죄로 몰아가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이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몫이라고 봐요.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보호해줬다면 범죄의 길로 들어서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면 잊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점점 더 또렷하게 떠오르지만 하니 괴로운 거지요. 남들은 시간이 가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위로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묵주기도로 이겨가고 있고, 늘 함께해주는 조성에 수녀님이 계셔서 큰 의지가 됩니다.

이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출가한 과천의 딸 집에서 지내면서 더 이상 살아서 뭐하겠느냐며 자포자기하다시피 했지요. 서울대공원으로 어디로 하루에 예닐곱 시간을 정처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잠도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을 자기 힘들었고요. 두 딸 중 함께 산 둘째가 특히 충격으로 힘들어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모를 일이었어요. 막상 범인이 잡히고 난 뒤 저도 알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도 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족의 죽음을 똑같은 죽음으로 되짚는 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용서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유영철에게도 제 딸들의 자식과 비슷한 또래가 있다는 얘길 듣고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싶기도 했고요. 하느님의 뜻인지 모르나 저도 모르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뿐 아니라 천주교에 입교한 신자로서도 미움을 버리고 용서의 길을 택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여겼어요.

용서해주고 나니 마음이 전보다 편안해졌어요. 잠도 더 잘 이룰 수 있었고요. 건강 또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용서가 하느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유영철을 죽여서 내가 두 번 죽는 것보다 살려서 하느님의 운명에 맡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녀님은 저를 하느님과 더욱 단단히 연결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녀님을 '천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애비인 나는 범인을 용서하고 자식인 두 딸은 나와 수녀님, 유영철을 미워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흉악범을 용서하는 게 사회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처럼 비치다 보니 남은 가족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건가 봐요. 외국에서도 그렇다더군요. 하지만 어쩔 겁니다. 길이 서로 달라 그렇겠거니 하고 기다릴 수밖에요.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는 동안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알고 보면 피해자 가족이나 가해자 가족이나 모두 피해자이지요. 범인들 역시 환경이 어려워 죄를 지은 측면이 강하다고 봐요. 그들을 재생의 길로 이끌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도록 하자는 수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유영철을 마음의 양자로 삼고, 사형제 폐지운동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유영철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생각  
을 했지만 저는 2004년 7월 10일 외친  
성상에서 영세함을 받고 죽은 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사감을 청장님  
이 저의 솔직한 심정을 두서 많은 글을  
읽습니다. 우리 유영철을 신처와 사랑으로  
유명한 유영철을 관대히 취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2004년 7월 19일

고정원 (루치아노)

나도 저게 2004년 7월 10일 외친  
성상에서 영세함을 받고 죽은 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사감을  
청장님이 저의 솔직한 심정을 두서  
많은 글을 읽습니다. 우리 유영철을  
신처와 사랑으로 유명한 유영철을  
관대히 취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2004년 7월 19일  
고정원 (루치아노)

### 유영철이 피해자 고정원 선생에게 보낸 편지

어르신, 못한 인간 인사 드립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세상스레 사회의 말씀을  
 드린다. 그것조차 영지가 없지만 어르신의 놀라우신  
 사랑에 지은한 이렇게 슬프지만 가슴 아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영결 때나 무슨 때가 되면 어르신의 가슴시림이  
 저에게도 느껴질 정도로 많이 힘드셨을텐데  
 그럼에도 저의 외로움을 영려해주시고 영치금 까지  
 배려해 주신 어르신의 그 기록함에 이 못한 인간  
 그저 면목 없어 근개만 숙여지고 눈물만 흘립니다.

어르신께서 그토록 따뜻한 분이셨기에 사민님은  
 마지막 순간 까지 어르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야 조금이나마 그 심정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양갈음이 목적이었다면 귀의 바보 같은  
 환난에 희생양이 되셨던 할머니와 사민님 그리고 저와  
 동갑내기였던 아드님의 모습까지 요즘 들어 부쩍 꿈속에  
 자주 나타납니다.

감히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의 미래는 없지만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 까지 용위고 있는 시간 시간  
 뉘우쳐겠습니다.

괜한 인사가 어르신께 심려를  
 끼치지 않으나 걱정이긴 구차한  
 변명 같아 긴 말씀 올리지도  
 못하겠습니다.  
 진정 골똥같은 심정으로 사회의 마음  
 가슴속 깊이 전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유영철 올림.

06.2.2



### 유영철이 조성애 수녀에게 보낸 편지

조성애 수녀님.

상처를 입고 저같은 증인의 씨앗을 키우게 되는데 아이때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부족함이 크면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어느 누구를 보다 아이들은 상처 받으면 안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비둘리게 자란 마음이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정원님처럼 사랑의 꽃이 어디까지 인가를  
 보여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그 분과 인연을 맺고 계시다니 나중이라든  
 기회가 되시면 이웃사랑의 줄을 전해주십시오.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놀랄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 분이나 수녀님이나 저나 이 세상과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생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애쓰시는 그 모습에 전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수녀님처럼 천사의 마음이 악마의 마음을 용좌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따뜻함이 누구들에게 제때 전해진다면  
 악마를 변해 가는 믿음은 미리 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랑 앞을 나뉘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양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전 저의 죄값 온전히 지르고 이 복잡한 마음도 비우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써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6.2.2

유영철



## 사형폐지의 근거와 대안

김형태 변호사(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운영위원장)

“올바른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1981년 프랑스의회 선언>

### 1. 이론적 측면

국가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박탈권을 가지지 못한다.

####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 1. 요지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 ● 반대의견

생명권의 제한은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며 생명권의 본질은 생명 그 자체이므로 이의 박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냐는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헌법 제12조가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신체는 본래 생명이어야 존재하는 것이므로 생명의 박탈은 곧 신체의 박탈이며 신체가 없는 신체의 자유권은 그 본래의 의미까지 상실하게 되고 결국 신체자유권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헌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함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입법수단의 필요성(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등 제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제1차적이고 원칙적이며 상대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을 정한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는 위와 같은 상대적인 한계규정을 준수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최종적이고 예외적이며 절대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을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생명권은 다른 기본권들과는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이 생명의 유지이므로 생명의 박

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위의 절대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되므로 생명권이 헌법상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는 헌법 제37조 제2항 본문과 단서 규정을 오해하였거나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오해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2 범죄 억제의 효과 여부

사형은 존치론자들이 고집하는 것처럼 범죄 예방이나 억제의 효과가 없다. 여러 과학적인 연구들이 다른 형벌에 비해 사형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조사는 유엔이 실시한 1988년과 2002년도 조사이다. 이 두 차례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형제도가 종신형과 같이 그 위협도가 떨어진다고 간주되는 다른 형벌에 비해 큰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세이다.”(참조: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third edition, 2002, p.230)

또한 위 보고서는 214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통계수치들이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사형폐지국의 범죄수치를 볼 때도, 사형의 폐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75년 당시 3.09명이던 것이 1980년대는 2.41명 그리고 사형을 폐지한 지 27년이 지난 2003년도에는 1.73명으로 줄어들어,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하였다.

(출처: Amnesty International, *The Death Penalty: Facts and Figures on the Death Penalty*, <http://web.amnesty.org/pages/deathpenalty-statistics-eng>, Last updated: 4 October 2005)

## 3. 오판 가능성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무고한 사람을 사형 집행할 위험성은 절대 없앨 수 없다.

## ● 국내

- 인혁당
- 김기용 순경
-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 ● 미국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명의 사형수가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석방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형 선고 후 수년이 지나 처형이 임박해서 풀려나기도 하였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의 잘못, 신빙성 없는 증인의 진술이나 물리적 증거 혹은 자백의 채택, 부적절한 변호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 유죄사실과 관련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사형집행된 많은 사람들이 있다.

2000년 1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조지 라이언 당시 주지사는 모든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유보)을 선언하였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1977년 일리노이주에서 사형집행이 재개된 이래 오판에 의해 사형 집행된 사람이 13명이나 된다는 발표에 이은 것이었다. 1977년 이후 일리노이주에서는 총 25명이 사형집행 되었다.

## ● 오판 가능성에 대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2003)

대 상	비 율(%)
일반국민(1064명)	93%
시민단체 상근자(260명)	99.2%
언론인(280명)	94%
국회의원(100명)	95.7%
법관(113명)	69.9%
검사(138명)	41.3%
변호사(105명)	85.7%
교도관(106명)	57.5%
교정위원(96명)	93.2%
교도소 의무관(55명)	83.6%

#### 4. 폐지의 세계적 추세

##### ● 문명국은 모두 폐지

##### 세계의 사형제 폐지 역사

연도	국 가	연도	국 가
1848	산마리노	1982	네덜란드
1863	베네수엘라	1983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1865	산마리노	1984	아르헨티나
1867	포르투갈	1985	오스트레일리아
1870	네덜란드	1987	아이티, 동독, 리히텐슈타인
1877	코스타리카	1989	캄보디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1905	노르웨이	1990	만도라, 크로아티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모잠비크, 나이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1906	에콰도르	1992	앙골라, 파라과이, 스위스
1907	우루과이	1993	기니비사우, 홍콩, 세이셸, 그리스
1910	콜롬비아	1994	이탈리아
1921	스웨덴	1995	지부티, 모리타니, 스페인, 몰도바
1928	아이슬란드	1996	벨기에
1933	덴마크	1997	그루지아, 네팔, 폴란드, 볼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42	스위스	1998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영국
1947	이탈리아	1999	동티모르, 루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1949	서독, 핀란드	2000	코트디부아르, 알바니아, 볼타
1950	오스트리아	2001	칠레
1956	온두라스	2002	키프로스, 유고슬라비아, 터키
1961	뉴질랜드		
1962	모나코		
1966	도미니카 공화국, 솔로몬 군도		
1968	오스트리아		
1969	바티칸 시국		
1971	몰타		
1972	핀란드, 스웨덴		
1973	영국		
1976	포르투갈, 캐나다		

1978	덴마크	2003	아르메니아
1979	룩셈부르크, 니카라과, 노르웨이, 브라질, 피지, 페루	2004	부탄, 사모아, 세네갈, 터키
		2005	라이베리아, 멕시코
		2006	필리핀
1981	프랑스, 카보베르데	2007	알바니아, 르완다, 키르기스스탄

\* 이름이 중복되는 나라는 1차로 전시 등의 예외를 두고 사형제를 폐지한 뒤 2차로 완전 폐지한 나라들임. <자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 ● 폐지현황 (2007. 9. 19 현재)

- ①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90개국
- ②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11개국
- ③ 사실상 사형폐지국: 32개국
- ④ 전체 사형제 폐지국 또는 사실상 폐지국: 133개국
- ⑤ 사형 존치국: 미국, 중국, 일본 등 64개 나라.

##### ● 사형집행현황

###### ① 국내

연도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인	유괴살해	간첩 등	계	일본
1970	1	11			2	14	26
1971	2	3	1		5	11	17
1972	6	8			20	34	7
1973	1	2			4	7	3
1974	17	20	2		19	58	4
1975							17
1976	8	16	1	1	1	27	12
1977	5	15	1	2	5	28	4
1978							3
1979	3	5		2		10	1
1980	5	4				9	1
1981							1
1982	8	10	2	1	2	23	1

1983	6			1	2	9	1
1984							1
1985	1	3		3	4	11	3
1986	4	5	1		3	13	2
1987	1	2	1	1		5	2
1988							2
1989	3	3		1		7	1
1990	6	7	1			14	
1991	5	1	1	2		9	
1992						9	
1993							7
1994						15	2
1995						19	6
1996							6
1997						23	6
1998							4
1999							5
계	82	115	11	14	67	355	145

자료 : 헌법재판소 9헌바13호,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법무장관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에서 원용함. 1992년 이후는 한인섭 교수의 논문중에서 원용.

## ② 국외

1999년	중국	최소 1077
	이란	165
	몽고	100
	사우디	103
	미국	98

\* 미성년자 사형 집행 국가 : 1990년대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 미국, 예멘

## 5. 사형폐지와 여론.

### ● 국내(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2003)

대 상	비 율(%)	대 상	비 율(%)
일반국민(1064명)	34.1%	검 사(138명)	16.7%
시민단체 상근자(260명)	85.8%	변호사(105명)	60%
언론인(280명)	54.3%	교도관(106명)	11.3%
국회의원(100명)	60%	교정위원(96명)	80.6%
법관(113명)	53.1%	교도소 의무관(55명)	11%

### ● 프랑스

1981년 폐지법안에 대해 66%가 반대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회는 “올바른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사형제폐지 입법을 통과시켰다. 처음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18년 지내면 가석방도 허용하고 있다.

### ● 국제적 폐지 노력

- ① 1948년 유엔세계인권 선언.
- ② 국제 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  
유고연방 및 르완다 전범처벌을 위한 유엔안보회의 결의안 ; 전쟁, 학살범죄 등 반 인륜적 범죄라도 사형부과 금지.
- ③ 1989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  
제1조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 관할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한다” : 54개국 서명 비준, 8개국 서명
- ④ 유엔 인권위원회 : 1997년 이후 매년 사형폐지 집행유예 권고결의(2004년 76개국)

## 6. 종신형 대체입법을 통한 범죄 재발 방지 및 범죄자의 처벌 및 교화

## 7.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부조 체계 확립

나는 오늘  
모든 사형수를 감형한다  
조지 라이언(일리노이 주지사 역임)



미국 일리노이주의 지사를 역임한 조지 라이언(George Ryan)씨는 지사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집행을 정지하고 있던 모든 사형수의 감형을 발표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2003년 1월 11일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행한 감형 연설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어디에 정의와 공평이 있다는 말인가?

일전에 벨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미국이 전 세계에 정의와 공평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유럽, 캐나다, 멕시코와 그밖에 중남미 국가 등, 사형을 폐지한 대부분의 동맹국들과는 달리 제3세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까지도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2개 주가 사형을 폐지했지만, 그 어떤 주에서도 살인사건의 증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작년에 약 1,0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2%에게만 사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대체 그 어디에 공정과 평등이 있습니까? 일리노이주의 사형제도는 공평하고 평등하게 부과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구형할까 말까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102명의 일리노이주 검사가 준수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요인이 사형판결을 좌우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어떤 지방에서 1급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질 확률은 쿡 카운티의 5배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정의와 공평이 있다는 말입니까?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형의 문제점을 역설하는 조지 라이언 주지사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번 주 저에게 보낸 편지에서 "생명이 박탈된 때에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은 복수이지 정의는 아닙니다. 신은, 정의란 자비와 관용과 불쌍히 여김을 수반하는 것이며, 이것들은 미덕이지 결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고 써어 있었습니니다.

"실제로 가장 나쁜 결점은, 이론상 사형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집행에서는 약하고 가난하며 지식이 없는 소수인종에게 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이것은 팻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 전 지사의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50년 전에 그가 <공적 정의, 사적 자비>(Public Justice, Private Mercy)를 집필한 후 지금까지 거의 50년 동안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이영우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사형수들을 데려오는 일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 사형수들이 갯방에서 사형장까지 오는 길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길이다. 이 길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갯방 안에 앉았다가 '00번 나와!'라는 소리를 들으면 발버둥을 친다. 쇠창살을 붙들고는 '나는 안 가! 못 가! 살고 싶어. 죽기 싫어!' 하며 발버둥을 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수갑을 채워서 들고서라도 목을 매달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끌려오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찾는데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목 놓아 울며, 부르며 그 길을 온다. 창들 사이에 조그맣 들풀이 피어 있어도 그곳에 코를 대고 떼부가 찢어지도록 풀냄새를 맡는 이도 있다. 마지막으로 조그맣 쪽문을 들어서기 전에는 창문 틈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고 땅 한 번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수갑을 차고 끌려오면서도 생의 마지막 발걸음들이 두렵고 아쉬워 그냥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보폭이 5cm도 될까 말까 하게 발걸음을 땀다. 그렇게 오다가 일부러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한창을 걸어가다가 '달달님, 저 신발 벗겨졌습니다.' 라며 다시 신발을 좇으러 또 돌아온다. 그만큼 더 살겠다고, 또 다시 신발 있는 데로 돌아와서 신발을 신고 돌아서고 한 발자국이라도 벌며 1분, 1초라도 좀 더 살아보고 싶었던 생명에 대한 처절한 애착이다. 죽음의 길에서 보여주는 사형수들의 모습이다.

사형수들은 자신이 지내던 갯방에서 불러 나와 긴 지하복도를 걸어서 자신이 목매달려 죽을 지하실 밑을 통과한다. 사형장 밑을 통과하면 바로 문이 있다. 사형수들은 계단을 올라 문을 밀고 집행하는 곳에 있게 된다. 그게 사형장이다. 나도 그때 사형장은 처음 봐 본 것이다. 처음 들어오니 얼마나 삭막하던지... 밧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을 묶어 죽였는지 기름이 묻은 듯 반질반질했다. 그것을 보니 비위가 췌 뒤틀렸다. 매스꺼움을 느꼈다. 오늘 이곳에서 목매달려 죽어야 하는 밀음의 형제들, 불쌍한 사형수들이라는 인간적인 애처로움과 서러움이 계속 배어 나왔다.

< 사형장이 하늘가는 밝은 길로 > 중에서

사형집행 현장에 함께 했던 교도관의 증언이다. 과연 나에게 이런 사형집행 명령이 내려진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또 사형장에서 사형집행 과정을 지켜보고 죽어가는 사형수를 직접 본다는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하기 싫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하지만 법의 이름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곳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고 직접 살인의 현장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의 공정한 집행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살인인 것이다. 비참하고 충격적인 체험을 하면 사람의 심성이 황폐되기 쉽다. 바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사형집행 장이다.

1992년에 미국 정신분석학자 몇 명이 의미 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다. 1992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사형집행 현장에 입회하여 취재한 기자 18명을 대상으로 사형 집행을 목격하는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다. 연구결과 사형집행을 참관한 기자 18명 중 대부분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보였다. 기자들이 보인 심리적 문제를 보통 '해리(전환)장애'라고 말한다. 해리장애는 뇌의 이상 없이 심리적 원인으로 기억상실이 발생하는 장애이다. 이미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갑자기 회생시키지 못하는 장애인데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되어, 심적 자극을 준 부분을 선택적으로 또는 사건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때로는 평생 동안 일정기간에 대한 기억상실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보호본능, 다른 말로 하면 '정신방어기전'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과 결부된 감정은 의식 밖으로 밀어내 감정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확보하고 견디게 되는 것이다.

사형집행을 본 기자들은 그것을 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을 분리시켜 사형집행 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한 기억을 없애 버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그런 현상이 사형집행이라는 그 사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이렇듯 사형집행은 단순히 사형수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인의 공범자로 만들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집행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집행현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 검사와 교

도관, 성직자들은 엄청난 심적 충격을 받게 된다. 곧 그들의 인격이 법 앞에서 법의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집행을 주장한다.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인의 현장에 대한 끔찍함은 기억하지만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을 하루에 몇 명씩 죽이는 형장의 끔찍함은 기억하지 못한다.

사형집행 현장에서 법의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인권의 피해자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범죄로 인해 살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 사형수의 인권

### ● 사형수에게도 인권은 있다

사형집행 현장에서 가장 크게 인권이 침해되는 사람은 바로 사형수이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인권이 어디 있는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인권은 누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인 것이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천부적인 것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 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인권이 가장 크게 훼손당하는 것은 생명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생명 역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박탈한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 ● 공평하지 못한 법에 의해 사형수가 양산 된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사형수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정이 해체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형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명성이 자자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면, 좋은 집안의 자녀였다라면, 또 사회적 분위기가 좋은 시기였다면 사형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된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사형수는 범행 당시 어떤 사람이었고, 왜 잔혹한 범행을 하게 됐을까.'를 심층 취재한 적이 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사형수 63명을 참사 취재한 결과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업을 갖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 돈 부족에 허덕였고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범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었다.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7%였고 복수심 때문이 30%였다. (국민일보 2006.2.19)

사형수들 대부분은 범행 전에 사회의 약자들이었다. 또한 재판 중에도 법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형집행은 사회적 약자를 법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수단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 두 번 죽는 사형수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교수형 집행 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사형수를 두 번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수환 추기경의 회고록에도 나오듯이 사형집행 때 교수기가 고장이나 다시 집행 한 경우도 있었다.

“그는 천주교 묘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형대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잠시 후 “쿵”하는 소리가 컷전을 때렸다. 그 소리는 심장에 꽂히는 비수(匕首)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주위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현장에 가보았더니 그가 목에 밧줄을 걸고 정말 편안히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무로 된 낡은 교수기(絞首機)가 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아래로 함게 떨어진 것이었다. 소장은 즉시 ‘사형집행 계속!’ 명령을 내렸다. 젊은 사람을 두 번 죽여야 하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난 애처로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간수들이 사형대를 고치는 것을 태연스레 보고 있던 월강이가 딸문을 열었다. ‘제가 반시간쯤 후면 천당에 가 있겠네요.’라며 날 위로하는 듯 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두 번째 죽음도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사형수 최월갑과 희망원’ 중에서

교수형은 신체에 손상이 없고 피도 그다지 나오지 않으니까 잔학하지 않고 교도관의 저항감도 그다지 없다는 것이 집행하는 측의 입장이다. 외국에서는 사형수의 고통을 가급적 없애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집행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수형을 피하고 있다. 외견상의 손상 유무나 잔학성보다도 본인의 고통을 가급적 없앤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다. 교수형이 사망하기 까지 가장 긴 시간을 요한다면 교수형이야말로 가장 잔학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사형집행이든 사형집행은 가장 잔인한 형벌인 것이다.

## 교도관의 인권

사형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심정이나 정신적 고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앞의 글에서도 나왔듯이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통보해야 하는 교도관의 심적 고통. 그리고 죽음의 행진에 참여해 사형수를 방에서 끌어내 사형장까지 함께 동행해야 한다. 더구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저항하는 사형수를 억지로 끌고 형장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교도관의 역할은 바로 저승사자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리고 형장에서 사형수의 몸을 묶고 두건을 씌우고 밧줄을 목에 걸고 마지막 스위치를 누르고 죽음을 확인해야 하는 교도관의 업무는 누구도 관심이 없다. 흉악한 범죄자 한 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형집행에 가담해야 했던 교도관을 오히려 손가락질 한다.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사형을 주장하고, 법관은 흉악범을 국민감정 혹은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인 교도관에게 명령하여 집행한다. 사람을 직접 죽이는 무서운 업무만 교도관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소설가 앨런은 “사형은 지지하고 있으면서 왜 집행인은 미워하는가?” “사형이 있으면 집행인이 필요하며, 누군가 이 업무를 ‘의무’로 행해야 하는데, 왜 직접 집행을 하는 사람만 미워하는가?” 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인이 임신 중의 집행, 저항하는 수형자의 목에 로프를 감는 불쾌감, 회개한 사형수를 죽여야 하는 모순, 교도관과 사형수가 인간적으로 교류한 이후의 처형, 특별히 원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인간을 냉혹하게 죽여야 하는 현실. 이 모두가 교도관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사형집행이 끝났을 때, 참여한 교도관들은 눈에 핏발이 서는 등 제정신이 아니다. 이들은 서둘러 구치소 근처의 술집으로 몰려가 강소주를 밤새도록 퍼마신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또 사회정의를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그들의 손에 죽어간 사형수들은 오랫동안 부대끼면서 정이 들었던 얼굴들이다. 집행 후에는 교도관은 집행 뒤의 소감을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한 거죠」라고 했다.

교도관은 죄를 저지른 자를 바로잡아(矯) 올바르게(正) 인도하는 직원이며, 교도소는 바로잡아(矯) 인도하는(導) 장소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장소(교도소)에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직원(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끔(사형) 강요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교정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교도관이 사형집행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악마의 길에 빠진 자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같은 손으로 이번에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 종교인들의 인권

사형수들은 형이 확정되면서 거의 종교에 귀의한다. 그리고 성직자들과 종교위원들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화된다.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조성애 수녀는, “형이 확정되고 집행될 때까지 5, 6년간 사형수들의 수형생활과 집행 순간을 지켜보면 누구라도 사형제도의 비정함에 진저리를 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초기에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다. 시간이 좀 흐르면 구치소를 드나드는 종교인들을 통해 종교에 귀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여전히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해 때때로 자살충동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면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며 재소자들을 전도하기도 한다.

이렇듯 변화되어가는 사형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죽음의 현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많은 갈등과 아픔을 안겨준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종교적 신념과 사형수들과 관계에서 사형 제도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 사형수의 마지막 길에 동행하기 위해, 또 사형수들과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형집행 현장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제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지만 갈등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모순에 심각한 고통이 큰 것이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죽어가는 사형수를 볼 때는 자신의 무력감과 더불어 더 큰 아픔을 겪게 된다. 안성농협 카빈총 강도 살인 사건 범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어느 사형수는 형이 확정된 뒤에도 재심 청구를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 서울변협이 나서 구명운동을 벌이던 중 집행되자 "오관한 판·검사와 위증을 한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후 처형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사형수들을 대할 때만 해도 사형이 필요악이거나 막연히 생각했던 문장식 목사는 오관에 의한 억울한 죽음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문 목사님은 특히 87년 4대독자 사형수(강도 살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를 외치며 처형되자 노모가 이듬해 구치소 뒷산에서 음독자살하는 등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형수가 보낸 편지 중에도 서로가 사형장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이 있다.

“신부님!

마지막 코스에서 만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하셨지요?

솔직히 저도 스산한 형장에서 신부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음산한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한 달 뒤 미사를 약속하고 헤어지는 발걸음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다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까!”

온갖 정성과 사랑을 통해 변화된 형제들을 형장에서 만난다는 것은 사형수나 사형수 교정교화를 위해 함께 했던 성직자, 수도자, 봉사자들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 마지막 코스에서 내가 함께 했던 사형수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교정교화를 담당하고 신앙으로 인도했던 종교인이지만 마지막 코스인 형장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사형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면할 수 없고, 그 고통의 길에 함께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다. 성직자들은 여러 죽음을 목격하고 체험하지만 며칠 전 까지 밝게 웃고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했던 사형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그것도 인위적으로 죽이는 현장을 보고 초연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도 하루에 여러 명이 집행되는 과정을 다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사형집행에 입회했던 신부님들 중에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심신이 황폐해지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신부님은 보름정도 제대로 식사도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 형장에서 죽어간 형제들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아직까지도 그 아픔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집행 형장에서 사형수들을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집행의 끔찍함과 허탈감 그리고 그로 인한 심신의 피곤을 넘어서 인격의 파괴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는 종교인들이 죽음의 현장에 참여해야 하는 그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살해 피해자의 인권

사형 존치론자들은 사형존치 이유 중 하나로 피해자의 감정을 이야기 한다. 피해자의 감정을 생각해서라도 가해자를 사형시켜야 된다는 논리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용서하기 보다는 범인을 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피해자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을 무시할 수도 없다. 하지만 과연 가해자를 사형시키는 것으로 피해자의 감정이 풀릴 것인가. 그리고 살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인가.

범죄로 인해 가족이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상상할 수 없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더불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또 당하게 된다. 살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 외에도 더 큰 아픔을 함께 겪어야 했다. 살해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는 이웃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함께 가족들이 범인으로 의심받아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사건 현장을 가족들 손으로 치워야 하는 아픔과 함께 가족 중 한 사람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럽게 큰일을 당하고 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했다고 했다. 마음껏 얘기할 곳도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어 혼자 울며 다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지금도 목숨은 건졌지만 다친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인한 두려움이 피해자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범죄 피해자에게 너무 무관심하다. 범죄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 잠깐 등장하고는 뒷전으로 사라지는 ‘투명인간’에 불과하다. 사형 집행으로 역할을 끝내는 국가, 필요할 때만 피해자 감정 운운하는 존치론자, 사건을 충격적으로 보도하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언론. 이런 무책임한 현상이 피해자들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런 고통과 상처는 피해자들에게 깊은 슬픔과 절망을 체험하게 만들고 범죄자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만을 키우는 환경을 제공하기 쉽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심정,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며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가해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리고 어루만져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쇼크를 치료해 주고, 유자녀의 학비를 감면해 주고, 경제적 어려움

에 직면한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등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거의 없고 피해자 가족은 그 아픔을 혼자 다 끌어안고 혼자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다.

살해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해자를 사형시킴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게 노모와 부인, 4대독자를 잃은 고정원씨는 유영철을 용서했다. 고정원씨는 사건 직후 심한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가장으로써 가정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죽고 싶은 마음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죽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고 죽자 라는 소리가 들렸고 유영철을 용서해 주었다. 그랬더니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함께 화해와 용서를 호소하며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 그리고 해마다 2주간 '희망여행'을 통해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희망여행'에 고정원씨도 함께 참여하며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화해와 용서를 통해 얻어지는 치유를 함께 체험하기도 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과 아픔, 처절한 절규를 마음껏 펼쳐놓고 애기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이 필요하다. 자조 모임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잘 승화시켜 고통에서 스스로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와 사회단체, 종교단체도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신과 갈등의 사회에 용서와 화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신의 아픔을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결론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집행한 후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사면위원회의 분류에 따라 올 12월 30일이면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된다. 이미 세계 133개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다. 또한 EU는 가입조건으로 사형폐지 국가라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에 서명을 하여 그 법안을 국회에 제출에 놓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특별법에는 사형제 대신에 종신형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범죄는 엄하게 처벌을 하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만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사형제 폐지는 생명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운동이다. 어릴 때부터 잘못된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면 커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자신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유무를 판단한다면 그보다 무서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예가 바로 유영철과 정남규를 들 수 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잘못된 사람은 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의 생명만큼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다면 커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존중되고 지켜지는 사회가 된다면 국민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보호하는 문화가 싹트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사형폐지 운동은 사형수의 형 집행을 막자는 것에서 벗어나 이 사회에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살인 피해자 유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우리는 홍수 등 자연재해로 아픔을 겪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그 피해를 위로하고 아픔을 달래주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살인자에 의해 빼앗긴 살인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회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죄인 아닌 죄인으로 2차, 3차 피해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중 일부는 심한 정신적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자녀 중 일부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에 대한 원망 속에서 범죄자의 길을 걷기도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형제 존폐 그 자체에만 논란을 벌이고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살인 피해자 유가족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범죄 피해자 구조법과 보호법을 제정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

<사례> 안 아무개 씨는 유영철에 의해 큰 형이 살해당했다. 그러자 바로 그해에 둘째 동생은 자살하였고, 막내 동생 역시 술로 세월을 보내다 세상을 뜨고 말았다. 남은 가족은 세상에 대한 저주와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네 형제 중 유일하게 남은 안 씨는 차라리 죄를 짓고 구치소에 들

어가 유영철을 죽이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국가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감추지 않았다. 사형수는 어쨌든 국가가 돌봐주고 있지만, 자신의 가족은 정신적 충격은 물론이려니와 하루하루 살아갈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이다.

## 희망여행

해마다 미국에서는 '희망여행'이라 이름 지은 2주간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살인'이라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과 타인의 목숨을 빼앗아 사형수가 된 자들의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다.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 그들은 해마다 가을이면 미국 각지에서 모여 캠프장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차로 이동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전한다.



피해자 유가족의 마음을 생각하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사형 제도를 없애자고 사회에 호소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 유가족이 가해자

의 사형 집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가는, "그러면서도 죽은 사람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며 언론과 사회의 비난을 받고 만다.

한편 가해자인 사형수의 가족은 어떨까? 사형제도에 반대하기는커녕 가족 중에 사형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하물며 피해자 유가족과 사형수 가족이 함께 행동한다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희망여행은 현재 4천 명의 회원을 가진 '화해를 위한 살인 피해자 유가족 모임'(MVFR)이라는 시민 단체가 주최한다. 가족이 피살되었는데도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미국에서도 보기 드문 피해자 유가족 단체이다. 이 단체는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해마다 희망여행을 개최해왔다.

## 처형보다 위로를 원합니다

‘화해를 위한 살인 피해자 유가족 모임’(MVFR) 사무국장 팻 배인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숙부를 잃음)

“안타깝게도 복수심이란 마약 같은 것이예요. 양이 적으면 부족해서 더욱더 필요로 하게 돼요. 저희 모임은 그런 체험을 거쳐 복수심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유가족의 대부분은 사형 집행을 지켜봄으로써 사건을 끝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해서 슬픔이나 고뇌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 현장에 입회한 가족의 대부분이 사형 집행의 허무함에 분노하고는 ‘너무 간단하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범인을 사형시키는 일에 매달려서 살아온 사람들은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고 말죠. 그리고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죽었는데 가해자는 고통도 안 받고 너무나 간단하게 죽었다’는 일종의 환상을 갖게 되고, 집행 후에는 그 환상에 매달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인이든 사형이든 죽인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희 모임이 사형에 반대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하고 유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살인이 반복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피해자의 추억을 더럽히지 말고, 더욱 인간적으로 취급해주시길 피해자 유가족인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 <희망여행> (사카가미 가오리 지음, 박병식 옮김, 푸른숲 펴냄) 중에서

##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방법

우리나라도 2005년 8월 상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 12월경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 입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고 있다. 천주교회도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 가족을 돕는 활동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 주변에서 범죄 피해자가 생길 경우에는 단순히 동정만 할 것이 아니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기관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결시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 범죄 피해자를 돕는 기관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02-923-47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5가 71 빛의 사람들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02-539-49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7(서초동 17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1층 111호

<http://www.kcvc.net>

위 중앙센터를 비롯해 전국 55개 검찰청 단위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설되어 있다. 대부분 사무실을 검찰청 내에 두고 있지만, 국고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로서 범죄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재정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각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 하시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해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20개 종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월 1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열고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

형폐지 국가가 되었음을 국내외에 천명했다.

국제사회에서는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올해로 10년째 사형집행을 유예해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사형집행이 없으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KNCC 총무 권오성 목사, 원불교 교정원장 이성택 교무, 감사원장을 지내신 한승헌 변호사,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의원, 워릭 모리스 주한영국 대사, 마틴 맥퍼슨 국제앰네스티 국제법률기구 국장, 야쓰다 요시히로 일본 사형폐지운동협회 회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참여하였고, 지난 2005년 살인범죄에 의해 일가족 3명을 잃고도, 그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내고 사형제도폐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고정원님도 참여했다.

##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인사 말씀 중에서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벌이든 범죄자들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절대 말살할 수는 없다"면서 "회개와 갱생의 모든 기회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 한국 천주교 추기경 김수환



지금 치사를 하고 있는 저 역시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사형연도가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국민의 힘과 세계 여론의 저항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4년 과거 저의 사형을 확정했던 바로 그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

다. 저는 불행 중에도 이러한 행운을 얻은 사람이지만 저와 저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영국은 어떻게 사형제도 폐지를 납득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사법체계도 완전할 수는 없으며 과거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무고한 사람들도 사형에 처해진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법집행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형제도는 살인이 문제해결의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사회가 갖는 잔인함의 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 워릭 모리스 주한영국대사

##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선언문

- 2007년,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 -

오늘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계의 지도자들과 시민·인권 단체들의 이름으로 오는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됨을 선포한다.

2007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되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12월 30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은 후 이 반문명적이고 반인권·반생명적인 제도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시민·인권 단체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 해 왔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제도의 반생명 반인권성을 세상에 알려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단 한건도 없었고 이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인 '범죄 억지력'에 대해서는 이미 1988년 UN이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 연구(2002년 업데이트)'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수많은 나라의 연구 결과들 또한 이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얼마 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소위 인혁당사건"처럼 독재 권력에 의한 정치적 사법살인들과 한번 집행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형제도의 잔혹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적한다.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안정한 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논리이다.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덜어지거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

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그들을 안정시켜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오관의 가능성과 더불어 형벌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형제도와 그 집행은 오히려 더욱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 뿐이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다. 유엔은 이미 전 세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를 천명하였고 이를 위한 결의안과 선택의정서가 채택 된지 벌써 오래다. 지금 회기 중인 62차 유엔 총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사형제도폐지 글로벌모라토리엄 결의안' 역시 그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 동의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접어든 이때에 더 늦추지 말고 17대 국회 안에 이 법을 통과시켜 '사형폐지국가'를 완성하고, 인권선진국으로의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이 선포식에 함께 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없는 10년,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음을 온 국민과 국제사회에 선포한다.

하나.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의하며 62차 유엔 총회에서 '사형제도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한다.

하나.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국가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10일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참가자 일동